



주간 통일정세

2008-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전투력에 만족”(4/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50군부대 산하 중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평양발로 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찰에서 중대의 임무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본 뒤 “중대의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침공을 일격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높은 군사기술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며 “중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 김정일은 “인민 군대는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 날을 맞는 혁명적 훈련 기풍을 확립한 결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면서 “위대한 일심단결의 전통과 역사를 빛내며 그 위력을 펼쳐가고 있는 이런 무적의 강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의 수행인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가장 최근의 일은 3월 1일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방문에 이어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간부들과 함께 국립교향악단 및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냄.

나. 정치 관련

● 南 MD 참여는 동족압살 책동(4/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한의 “보수 집권 세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참여하려는 것은 “동족 압살”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대결 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격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4월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MD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핵미사일 선제 타격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권을 가지자는”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
- 신문은 과거 미국이 남한에 MD 참가를 노골적으로 강요해도 “남조



선 인민들의 강력한 반전반미,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반대 투쟁’에 의해 무산돼 왔으나, 지금은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들이 동족 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책동에 서슴없이 동조해 나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 “南 위정자들”에 ‘선언’ 철저히 이행 촉구(4/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의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남조선(남한)의 현 위정자들이 북남 사이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두 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구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15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이행을 떠나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
- 그는 또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핵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공공연히 부정해 나가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은...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대결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0년 6·15공동선언과 지난해 10·4남북정상선언 채택을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면서 두 선언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강조
- 특히 두 선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함께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유훈”이 구현돼 있다고 말하고 남북정상선언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부각
-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보수 집권세력의 날로 우심해지는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 보고회에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

● 조선신보, 논평원의 글은 北노동당의 목소리(4/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노동당의 목소리”라며 따라서 “대외관계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논평원의 글’ 제목의 기사에서 “오래전부터 노동신문은 요긴



할 때 논평원의 글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일찍이 논평과 논평원의 글을 갈라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며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는 글은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논평원으로 내보낼 데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일반 논평에 비해 비중이 큰 논평원의 글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만 쓰고있다”며 “그 견해와 주장, 평가는 당보 편집집단의 견해와 입장을 직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그것은 곧 당(노동당)의 목소리로 된다”고 거듭 ‘논평원의 글’의 비중을 강조
- 신문은 남한의 “일각에서는 논평원의 글을 두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느니 조국통일 부문 기구나 단체의 공식담화에 등에 비해 격은 낮을 것이라느니 하는 공론이 분분했다”고 지적하며 이 글의 중요성을 주장

● 노동신문, “외세공조” 거듭 비난(4/4,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남조선(남한) 보수집권세력”이 외세 의존 정책과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
- 평양방송에 따르면 신문은 이날 ‘6·15공동선언은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면서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는 괴이쩍은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조선-미국 관계 우선론을 제창하고 과거청산을 배제한 남조선-일본 관계복원 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거듭 “실용 불도저” 비난(4/3,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거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험하게 비난

● 북, 이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비난(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남한 정부를 “이명박 역도(逆徒)”라고 비난하고 “(남측이) 지금처럼 북남 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를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또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며 거부
-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반복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이름을 49번 직접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은 북남 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돼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한 공식 매체가 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비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남한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것도 8년 만의 일임.

다. 경제 관련

● 주민생활 향상이 최대 과제(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주민생활을 높이는 것이 “현 시대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기관들에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인민생활 제일주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신문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당조직들에서 인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적 지도에 화력을 집중해 모든 일꾼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당, 국가 경제기관들을 비롯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며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과 경공업 혁명을 통한 생필품 증산, 주택난 해결 등을 지적

라. 군사 관련

● 南군당국, 대화·접촉 중단 책임(4/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이 남측의 답신에 재답신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은 모든 북남대화과 접촉이 중지되고 통행차단 조치가 취해지게 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남조선 군당국은 그 어떤 사소한 선제타격 시도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北, “군사적 대응조치 취하겠다” 재답신(4/3, 연합)

- 북한은 3일 북측의 ‘긴장 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천명한 전날 남측의 전화통지문의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은 3월 오전 9시 25분께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답신 전통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해당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언
- 북측의 전통문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답신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 국제마라톤대회서 北선수 1위(4/6,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서 6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공인 제21차 ‘만경대상’ 마라톤대회가 열렸으며, 북한 선수들이 남녀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케냐 출신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평양 개선문과 혁신-영웅-천리마-락원-광복거리 구간을 달렸다고 보도
- * 북한은 1981년 4월 김일성 주석의 69회 생일에 맞춰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를 시작, 1992년 4월 제12차 대회까지 개최한 뒤 7년간 중단했다가 2000년부터 재개

● 北, 10여 종목 올림픽 출전권 획득(4/5, 통일신보)

- 북한이 지금까지 사격, 양궁, 유도 등 10여개 종목에서 수십 명의 선수들이 2008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었다고 주간 통일신보가 보도
- 신문은 사격 종목에서 4.25국방체육단의 김정수, 채혜경, 김현웅, 류명연, 박정란, 조영숙 등 6명의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참가 자격을 획득했으며 양궁에서는 4.25국방체육단 권은실, 압록강국방체육단 김꽃순 선수, 또한 북한의 유도스타 계순희 선수도 모란봉체육단 안금애 선수와 함께가 올림픽에 나간다고 밝힘.

● 北여자프로권투, 김혜성·장성애 두각(4/5, 조선신보)

-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여자프로권투계에서 신인 유망주인 김혜성과 장성애가 3월 31일 평양체육관에서 끝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프로권투경기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량을 재확인

● 北청소년적십자 나무심기 한창(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청소년적십자가 ‘봄철 나무심기 기간’(3.27~4.6)을 맞아 각 지역에서 식목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매년 재난 방지를 위해 청소년적십자의 봄철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도 각 도 적십자지부, 군 적십자위원회와 함께 “위험 요소가 큰 주민지대와 지역”에 많은 나무를 심고 있다고 보도
- * 남북한 적십자는 2006년부터 식목일에 즈음해 매년 4월 금강산에서 ‘남북 청소년 나무심기’ 행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는 한적측이 당국간 긴장한 정세를 감안, 이를 제안하지 않아 무산



- **김일성생일 분위기 띄우기 시작(4/4,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경축 분위기 조성, 조선중앙텔레비전은 4일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해외 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기록영화를 방영했으며 '선군(先軍)이 펼쳐준 낙관의 무대', '만경대로 달리는 마음', '조선의 별'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 주석의 생일에 즈음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과 함께 조선우표사의 기념우표 발행 소식도 보도
 - * 북한은 4월 10~18일 평양에서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을 열고 앞으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할 계획

- **생필품, 상표·외장 디자인 '봄'(4/4, 조선신보)**
 - 경공업공장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기관인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상표와 제품의 외장을 지역 특색과 민족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느라 분주하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최근년간 경공업공장들에서 기술 개선(개선)과 현대화가 적극 다그쳐짐에 따라 새 제품의 형태도안을 작성하는 조선산업미술창작사가 많은 일감을 맡아 안았다"며 "창작사에서는 현재 기초식품 상표도안, 신발도안, 화장품도안 등 7개 대상의 제품 도안을 창작하고 있다"고 설명
 - * 내각 기계공업성 산하의 이 창작사는 기계제품 외형과 각종 상품의 상표·포장 등을 디자인하는 북한 유일의 산업디자인 전문기관

- **평양 '네온사인' 절전기술 도입(4/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시에 설치한 "야경 불장식(네온사인)"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불장식연구센터'가 새로 개발한 전기절약기를 이미 평양 시내 천리마 동상과 개선문 등에 설치해 절전 효과를 검증

- **南교육열 방불 北소학교 개학식(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월 1일 학부모 참관아래 진행된 평양팔골소학교(초등학교)의 1학년 첫 수업 표정을 보도, 신문은 3일 평양 광복거리에서 가장 큰 학교인 팔골소학교가 "실력 높은 상급학교에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해마다 보내고 있다"며 1992년 개교했지만 북한에서 뛰어난 예술인, 체육인도 다수 배출했다고 소개, 그만큼 학부모들이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설명
 - 신문은 북한 전역의 소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가방, 10여 가지의 학용품이 공급됐다면서 요즘에는 만화가 그려진 화려한 필통이 인기있다고 보도



- **종합미술관 개관…외국인등에 주문판매(4/3,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각종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종합미술관을 개관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통일거리에 문을 연 종합미술관 1층엔 미술관과 식당이 있고 2층에 상점, 지하에는 한증탕과 청량음료점이 있으며, 미술관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조선화, 유화, 보석화, 출판화가 전시
 - * 미술관에서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주문판매도 함.

- **北, 왕건-공민왕릉 관광도로 조성(4/3, 평양방송)**

 - 개성시에서 왕건왕릉과 공민왕릉을 잇는 관광도로를 완공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두 왕릉이 민족의 귀중한 역사 문화유산이라며 개성시가 “노동당의 뜻에 따라” 직선 도로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 “노력과 기계 수단을 집중시켜 시작부터 공사속도를 높였다”고 보도
 - * 왕건왕릉과 공민왕릉은 현대아산이 2007년 12월 시작한 개성관광의 ‘왕릉 코스’로, 북한은 두 왕릉을 포함한 개성시 10대 유적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신청

- **평양도 배급 끊겨…北식량난 절망적(제118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전역에서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도 4월부터 6개월 간 “배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5월이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주장
 - 평양 시민들은 약간의 예비식량을 갖고 있는 데다 식량이 떨어질 경우 평남 평성, 남포, 황남 사리원 등지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배급중단으로 인한 아사자는 별로 없지만 “보유 식량이 예전만 못한 데다가 식량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라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 소식지는 이어 평양의 한 간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된 홍수 피해와 비료 부족, 소토지 회수 등으로 공화국(북)은 사상 최악의 사태에 빠져 있다”며 “상황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라고 밝혔다며 평양과 함남 함흥, 함북 청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달부터 아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

- **조선천연기념물 도감 제3권 출판(4/2, 조선중앙TV)**

 - 조선문화보존사가 최근 북한의 동물 천연기념물 80여종을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한 ‘조선천연기념물 도감’ 제3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조선우표사 우표 발행(4/2, 조선중앙방송)**

 -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을 기념한 전지우표와 개별우



표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류명옥, 26일 멕시코서 WBCF 방어전(4/1, 조선신보)**
 - 세계여자복싱평의회(WBCF) 슈퍼플라이급(52.16kg) 챔피언인 북한의 류명옥(25) 선수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방어전을 갖는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WHO, 접경지역 에이즈 예방활동 합의(4/1, 연합)**
 - 북한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올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시와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WHO 평양대표부의 테즈 알리아 소장이 밝힘.
 - *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알리아 소장은 북·중 접경지역이 북한내 다른 지역보다 에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감시활동 일정과 지역에 대해 북한 보건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북미회담과 제네바 ‘비공개 양해각서’(4/6, 연합)**
 - 북한과 미국이 시한(작년 12월31일)을 3개월 이상 넘겨가며 힘겨루기를 해왔던 핵 프로그램 신고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외교가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같은 얘기할 것이면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북측의 결정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로 건너가 8일 힐 차관보와 회담한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결과를 예상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소식통은 6일 북·미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예상케하는 회동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단초가 됐다고 전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밖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미묘한 내용을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았으며 이는 대외에 공개된 기본합의문의 상세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건설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의사를 분명히하고 실제로 2007년 11월 중국에 제출하려던 신고서에 담겼던 30kg에 달하는 플루토늄과 영변 핵시설의 세부 내역 등은 ‘공개되는 문서’(성명 또는 합의문)에 포함시키고 우라늄농축과 핵협력 항목 등 미묘한 부분은



비공개 양해각서(또는 비밀합의록)에 담긴 것으로 예상

- 비공개 양해각서라고 하지만 우라늄농축과 핵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접시인’ 방식을 활용할 전망, ‘간접시인’은 미국이 자신의 이해사항을 기술한 뒤 북한이 이를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중국이 1972년 미·중 간에 체결된 ‘상하이 공동성명’을 참고해 제안한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짐.
-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측은 비공개 양해각서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는 정식 회담 등의 기회를 이용해 구두로 설명하면서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될 전망

● **北, 美강경파 비난(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의 대북 강경파를 비난하면서 “미 강경보수 세력은 조(북)미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도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혜택’이요, ‘자연’이요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무턱대고 우리 공화국(북한)에 넘겨썩워 사태를 6자회담 이전으로 되돌려 세우려”하고 있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이상기류설’ 북중관계 원상회복 시동(4/2, 연합)**

- 최근 북핵 신고문제 해법의 주도권을 놓고 ‘이상기류’를 보였던 북한과 중국이 관계 원상 회복을 시도, 왕강(王剛)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1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
- 왕 위원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우호와 친선,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은 확고하고도 변화할 수 없는 전략적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

다. 기타외교 관계

● **北방송인 2명, 獨방송국에서 6주 연수(4/6, 연합)**

- 평양방송의 독일어 방송요원 2명이 2007년 11월부터 6주간 독일의 대외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이들은 독일 외교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본에 소재한 도이체 벨레 라디오 본부에서 6주간의 방송연수 과정을 마쳤다”고 보도
- 도이체 벨레 산하 방송연수원 헬무트 오상 아시아 국장은 “북한은 대외방송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들어 더 많은 북한 방송인들이 해외 연수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

*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조선제2중앙방송으



로 출발했다가 1972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대남방송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대외방송을 송출

● **김영남, 세네갈 대통령에 축전(4/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3일 세네갈 독립 48주년을 맞아 압둘라예 와데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친선협조관계 확대·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폴란드대사 연회개최(3/3, 조선중앙통신)**

- 로만 이바슈케비츠 주북 폴란드 대사는 2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초청한 가운데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駐스웨덴 대사에 리희철 임명(4/1, 평양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스웨덴 주재 대사에 리희철을 임명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전임자인 전인찬 대사는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 8개국을 겸임해 왔으나, 이 방송은 리 신임대사가 이들 국가를 모두 겸임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 북한과 스웨덴은 1973년 수교했으며 무역협정(1973.11), 공업소유권 협력 협정(1996.1),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합의서(2002.4) 등을 체결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 전북지역 AI 발병 보도(4/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6일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라북도에서 조류독감(AI.조류인플루엔자)이 발생했다”며 한반도에서 AI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움.
- 북한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고 새로운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한편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각국의 AI 발병 소식을 속속 보도

● **南 ‘영어몰입 교육’ 추진 비난(4/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한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영어몰입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광신적인 외세 사대 행위”라고 비난, 신문은 ‘극심한 친미 사대 의식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남한)의 친미



보수 집권 세력은 ‘세계화’의 ‘추세’를 따른다면서 우리 민족의 재부이고 자랑인 민족어를 말살하려는 반민족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

●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비난(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대안 교과서’라고 만들어 내놓은 책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막지한 왜곡”이라고 비난

나. 남북교류

● 개성공단 南기업, 공단밖 개성주민 고용확대(4/6, 연합)

-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업체 가운데 개성 주민을 ‘간접’ 고용해 공단밖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5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69개 가운데 5개 업체가 북측의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개성 주민을 도급 방식으로 고용해, 이들이 공단에 출퇴근하는 대신 개성시내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11월 이러한 방식의 임가공 계약이 처음 체결된 이후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이 1년여 만에 5곳으로 늘었다”라며 “전기요금과 같은 작업장 관리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
- 도급 형태로 고용된 개성 주민들은 주로 의류 봉제나 가전 부품 조립 등 비교적 단순 기능의 작업을 하며, 임금 수준과 지급 방식은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와 동일
 - *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미화 약 60달러이며 ‘공단의 공단 인력’은 남측 기업이 맡기는 물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북한 기업소의 작업소당 수십명에서 많게는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남북협력기금법에 처벌규정 삽입 검토(4/6, 연합)

- 정부는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중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하 기금법)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짐.
- 통일부는 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개인 및 해당 단체를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문을 넣는 방향으로 기금법과 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나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뒤 입법예고 할 예정
 -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운영된 이래 2007년 11월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천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3조5천473억원이 사용



- **울산시·지역교회, 北 결핵어린이 성금전달 (4/4, 연합)**

 - 울산시와 울산교회연합회, 울산교회가 4일 각각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북한의 결핵인구가 100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30만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을 도울 모금운동과 구호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 출범한 단체

- **6·15북측委, 서울 공동행사, 당국 태도 지켜보야 결정 가능(4/3,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측 위원회는 2~3일 금강산에서 위원장 접촉을 갖고 올해 6·15 기념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를 계속해나가는 등 남북간 민간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남측위 관계자가 3일 밝힘.
 - 그러나 북측위원회측은 공동행사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남북한 “당국끼리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동행사 개최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임을 시사, 이에 따라 행사 시기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남측위 관계자는 설명

- **정부, 식목일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 보류(4/3, 연합)**

 -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위협’을 감안, 오는 5일 식목일에 맞춰 추진하려던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3일 알려짐.

- **등대복지회, 北 최초 종합장애인재활센터 건립(4/1, 연합)**

 - 대북지원단체인 등대복지회가 북한 최초의 장애인 치료·재활기관인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를 평양에 설립, 이 단체 신영순 상임이사는 3월 26-29일 평양을 방문, 2011년 6월까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 건물 준공을 목표로 5월 29일께 대동강 구역 문흥2동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합의

- **대북 경공업원자재 마지막 항차 출항(3/31, 연합)**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마지막(26번째) 항차분이 31일 출항
 - 남측은 이번 항차분까지 배송 완료되면 8천만달러 상당의 원자재 제공을 마치게 됨. 이번 항차를 포함, 북한에 섬유 39개, 신발 48개, 비누 7개 등 총 94개 품목의 원자재가 제공됐다고 남북협회는 밝힘.

- **농진청 관계자 등 北방북차단 발표 후 첫 방북(3/31, 연합)**

 - 북한 군부가 주말인 29일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것을 예고했지만 31일 오전 현재 남측 인사들의 방북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1일 오전 9~10시 지방 자치단체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 8명과 1천600여명의 민간인들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육로로 방북
- 이들은 방북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방북 수속에 걸린 시간도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소식통은 전언

● **대북 지원 충북 농자재 출발...내달 봉산 도착(3/31, 연합)**

-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농업교류에 나선 충북도가 지원하는 농자재가 31일 북송식(北送式)을 갖고 북한으로 출발
- 31일 오전 충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북송식에서 정우택 지사는 “북한과의 농업교류는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모아진 결과”라며 “화해와 호혜의 원칙, 실용성의 원칙,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러 정상 ‘소치선언’ 채택, “6자회담 전적으로 지지”(4/6, 동아)**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월 5~6일 러시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틀에 관한 선언’(소치 선언)에 서명
 - 양국 정상은 ‘미·러가 서로 적대시하던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고, 전략 핵무기를 최저 수준으로 감축할 것에 합의
 - 특히 공동 선언에는 “6자 회담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6자회담 합의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
 - 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MD와 NATO 확대와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하기로 약속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반드시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테러 분쇄를 위해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
 - 이 밖에 미국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지지하기로 했고, 에너지 문제는 새로 대화 창구를 통해 협력 강화에 합의

- **美-이스라엘, “시리아 핵시설 폭격정보, ‘美청문회 공개’ 의견 조율”(4/6, AP)**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 의혹 시설 폭격과 관련, 상세 정보를 이달 하순 열리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6일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를 인용 보도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6일 새벽 전투기 여러 대를 동원 시리아 북동부 지역 군사시설을 폭격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일절 비공개
 - 시리아 정부는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밝혔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 및 기술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이른바 ‘시리아-북한 간 핵 커넥션’ 의혹을 제기
 - 이로 인해 핵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
 - 하아레츠는 미 의회가 시리아와 북한 간의 핵 협력 의혹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보기관들의 예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에 따라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로 했다고 보도

- 하야레트는 또 이스라엘 군부는 진상을 밝히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과 미 행정부는 시리아가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들어 진상 공개에 합의했다고 보도

● 힐 차관보, 北-美 양자회담서 ‘진전’ 기대(4/6)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기자들에게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논의할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얼마간의 진전(some progress)을 만들어 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진전을 기대
- 힐 차관보는 오는 7일 동티모르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며, 김 부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9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관리들과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

● OPCW 사무총장 “北 화학무기-核문제 분리” 언급(4/4)

- 로젤리오 피르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은 4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노력과 북핵 협상은 “하나씩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들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
- 로젤리오 총장은 현재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6자회담 이외에는 북한과의 대화통로가 확보돼 있지 않다며, 두 문제를 분리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화학무기 제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 北-美 내주 초 동남아에서 회동, 북핵 신고 타결 주목(4/4)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음 주 초 동남아에서 만나 북핵 신고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
-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지난달 13일 제네바에서 만나 북핵 신고에 대한 잠정 합의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발표를 하지 못한 채 막후 조율을 계속해와 북·미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경우 핵신고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북한은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한 막후 협의에서 UEP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문제를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양측은 핵 프로그램 신고서의 형식을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 모든 형태의 핵 협력 등 3개의 큰 항목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북한이 핵심 쟁점인 UEP와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개입했음을 ‘간접시인’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음.



- **美관리, “북핵 불능화 위해 내년까지 4억1천만달러 추가 필요”(4/3)**

 - 미 행정부는 북한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올해 9월 끝나는 2008 회계연도에 5천만달러,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에 3억6천만달러 등 총 4억1천만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 에너지부 관리가 2일 언급
 - 미 행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북핵 불능화와 관련, 중유 지원 등의 명목으로 5천300만달러를 책정, 북핵 불능화에 필요한 총비용은 4억6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윌리엄 토비 미 에너지부 핵안보국 부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총비용을 추정하는 게 추상적이라고 전제한 뒤 “내일부터 전면적인 작업에 들어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불능화를 완료한다면 불능화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5천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 그는 이어 2009회계연도에 플루토늄이 담긴 폐연료봉을 북한으로부터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3억6천만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발언

- **美국무부 “이제 북핵신고 할 때”(4/3)**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신고에 대한 특별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이제 신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
 - 그는 10.3 합의에 따른 핵신고 시한이 이미 여러 달 지났음을 지적하며 “북한이 신고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거듭 지적

- **美국무부 “북한 대남비난발언 6자회담에 영향 없어”(4/2)**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기자간담회와 정례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최근의 발언들이 북한 핵 불능화 협상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그는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관영 및 반(半)관영 매체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발언들이 (현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
 - 그는 “북한의 비난발언이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6자회담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
 - 또 최근 북한의 비난발언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것으로 보느냐를 질문에 대해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

- **USA투데이, “한반도 溫기류 희망 사라져”(4/2)**

 -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최근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실험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철수 요구, 잿더미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한반도에 온(溫)기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1일 보도



- 최근 분쟁의 징후들로써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 전투기의 남한 영공 근처에 최소 10번이나 접근했고 북한의 탱크 정예부대가 전례 없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지적
- 또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지난 27일 개성공단에서 남한 정부관계자 11명에 대해 철수를 요구
- 이어 북한은 지난달 28일 서해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을 불바다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잿더미로 만드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USA투데이는 소개

● 조선신보, “北주민 6자회담 차질 와도 단호 대응해야”(4/1)

- 조선신보는 1일 노동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평원의 굴’에 대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찬동과 강경대응의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아마추어 정권에 의한 정세 역전의 불씨’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인민들 속에서는 남측 정권이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계속 벌인다면 6자회담 과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 또 “조선(북)의 핵포기’ 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라는 등식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가 채택되고 이행국면에 들어섰을 때 긍정적인 사태발전에 제동을 걸어보고자 망동을 부린 것이 일본이었다”며 “논평을 읽은 인민들은 남측 정권이 그러한 시대역행 세력에 합세했다고 인식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노동신문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비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민들은 그 내용을 드놀지(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입장으로 받아들였다”며 “논평을 통해 인민들은 남측 정권이 자기들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핵을 빌미로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금 북의 인민들은 논평의 구절에 나오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슬어를 되뇌고 있다”고 주장

● 北신문, 美강경파 비난(4/1)

- 노동신문은 1일 ‘사태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의 대북 강경파를 비난하면서 “미 강경보수 세력은 조(북)미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 지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혜택’이요, ‘자연’이요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무턱대고 우리 공화국(북한)에 넘겨썩워 사태를 6자회담 이전으로 되돌려 세우려”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조미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쏠리고 있는 때에 미 강경보수 세력들은 회담의 파탄과 사태 악



화만 바라고 있다”고 주장

- 이어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지연의 “기본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6자회담 합의문에서 미국이 공약한 우리나라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응에너르기(대체에너지)도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北, ‘비핵·개방·3000’ 거부(4/1)

- 북한 노동신문은 1일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비핵·개방·3000’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 막아 나서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를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비핵·개방·3000에 대해 “우리의 핵완전 포기과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한 것이라거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는 등으로 맹비난

● 美 “北 적대발언 6자회담에 도움 안돼”(4/1)

-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발언이 6자회담을 저해한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부 언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언이 6자회담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
- 케이지 부대변인은 “6자회담에서 미국의 초점은 북한이 완전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

● 힐 北에 핵신고 촉구...“인내심 닳아 없어지고 있다”(4/1)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인내심이 닳아 없어지고 있다”며 북한측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신고할 것을 거듭 촉구
- 그는 또 북·미간 막후조율작업에 나름대로 진척이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쉽지 않은 협상”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
- 이어 북핵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성미가 급해지고 있고,



인내심이 닳아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조속한 핵신고를 재요구

- 힐 차관보는 북한 관리들을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언제든 북한측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북핵신고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계속 만나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전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

● **조선신보, “南언동으로 남북관계 악화...6자회담 합의에 영향”(3/31)**

- 조선신보는 31일 ‘평화번영의 기회, 찌부러뜨리는 위험한 도발’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현재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면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북남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기는커녕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특히 “만약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경우 그것이 6자회담 합의이행과 핵문제해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말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전과 10.3합의 이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나. 미·북 관계

● **미국무부, 북미 7~8일 싱가포르 양자회담 공식 확인(4/5)**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힐 국무부 차관보가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려고 한다”면서 회담은 7일 예정돼 있으나 8일에 열릴 수도 있다고 언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8일로 결정됐다고 회담 개최 일정을 정정
- 케이시 부대변인은 간담회에서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신고와 관련된 문제들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과정, 북핵 6자회담 다음 단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이 회담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진전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면서도 “힐 차관보가 그의 서류가방에 북한 핵신고서를 갖고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회담에서 최종적인 해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회담전망에 신중한 입장
-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시리아 핵이전을 분리해서 신고할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형식보다 실체가 중요하다”면서 “실체가 있는 신고가 되기 위해선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과 핵시설의 폐기라는 최종단계로 옮겨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고 부연

● **美, 북한의 對미안마 로켓수출설 “관련정보 없어”(4/3)**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對) 미안마 다연장로켓 (MLAR)수출설에 대해 “그같은 보도를 봤다”면서 “그 보도를 뒷받침할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
-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징후가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 로켓 수출이 사실일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호 위반임을 지적

● **뉴욕필 사장, “北음대생들 초청해 연수시키고 싶다”(4/2)**

- 자린 메타 뉴욕필하모닉 사장은 2일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이후’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만난 음대생들은 실력이 좋았다”며 “이들 중 영어가 가능하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미국에 불러 2~3달동안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면서 음악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뉴욕필의 이같은 희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후원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앞으로 핵문제 및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선 북한 교향악단의 공연을 미국인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가능성
- 리비어 회장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과 북한 음대생들의 미국 연수는 미국과 북한의 교류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부연

● **VOA, 美전문가들 “北 대남 선택폭 제한적”(4/2)**

-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임 정권이 취했던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도록 전방위적인 위협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잇단 강경 행동과 발언은 “단순한 위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논평
- 그는 “북한의 군사력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고,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면서 “북한이 대남 공세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한돼 있으며 그마저도 지난 며칠간 모두 행동으로 옮겼다”고 진단
-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등 한국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 중단지 더욱 고통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이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계속 구사하다가는 올해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



- 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더 손해를 입는 쪽은 북한인 만큼 북한 당국이 고작 택할 수 있는 대남공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소란을 피우는 정도일 뿐”이라고 언급
-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 역시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역지력을 꾸준히 갖고 있었으며, 군사적으로 열세인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VOA는 보도

● 美 “북한産 가짜달러화 ‘슈퍼노트’ 계속 적발”(4/2)

- 스투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보는 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 소속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이 북한 위폐제작활동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슈퍼노트’로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정교한 달러화 위폐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 그러나 최근에 ‘슈퍼노트’를 얼마나 적발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무언급
-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06년 10월 ‘해외 달러화 위조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 1989년 비밀검찰국이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 5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달러화인 ‘슈퍼노트’를 처음 적발한 이후 16년간 5천만달러 상당의 슈퍼노트를 회수했다고 공개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무역 위안화 결제 제도 도입”(4/6)

- 중국이 북·중 양국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위안(元)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중국내 계좌 개설을 인정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
- 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위안화 결제제도를 만들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후 발동된 송금과 계좌개설에 관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완화,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중양은행)과 외화관리국이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규정을 마련, 북한과 국경무역을 활발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지린(吉林)성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등의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
- 중국과 무역하는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뒤 위안화 무역결제 전문계좌를 중국 내에 개설, 무역상대인 중국 기업과의 결제에 이용. 북한은 무역을 통해 얻은 위안화 수입으로 외화를 구입할 수 있어 외화를 합법적으로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송금 가능
- 중국의 대북한 작년 무역액은 약 20억 달러로, 이 같은 결제제도의



도입은 북·중 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압력이 악화됨에 따라 6자회담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

● 中이 보는 ‘남북경색’ 원인과 전망(4/4)

- 중국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음.
- 남북한 모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공직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논평과 관영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강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전술적인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당분간의 경색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음.
-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圭<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 교 교수는 4일 국제선구도보 기고문에서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긴장감을 조성해 한반도 정세가 동요해왔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전술상의 운용 방식이며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음.
- 그는 “북한 역시 핵문제의 해결하는데 한국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한국의 원조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제불능인 상태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러나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관계가 냉기류를 맞았다’는 4일자 기사에서 2월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 그 자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 북한은 3일 남북대화와 접촉 중지, 군사분계선(MDL) 통행 차단을 시사하는 ‘군사 조치’를 언급하고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당국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음.

● 북·중·러 3국간 국제철도 다시 통한다(4/4)

-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역을 경유해, 러시아 하산에 이르는 세 나라 간의 국제철도선이 지난 1992년 열차운행이 중지된 지 16년 만에 곧 재개통됨.
- 중국 언론은 투먼시 당·정대표단 및 선양(瀋陽)철로국 대표가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극동철로국측과 투먼-두만강-하산을 잇는 국제철도선의 재개통 문제를 협의한 끝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통해 우선 시운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3일 보도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다시 열리는 이 철도통로를 이용해 자국의 각종 물자를 상대국의 여러 지역에 운송하기로 하는 한편 화물 운송에 필요한 차량 신청 및 사용, 관련 경비의 지불절차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음.
- 북·중·러 3국은 이에 앞서 작년 12월25일 투먼시 세관에서 ‘북·중·러 지역간 철도화물운송 회의’를 열어 철도부문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고, 이 철도의 개통에 따르는 국제무역 화물운송 조건, 운송물량, 화물 인계인수, 화물열차 사용료 정산 및 결산, 운송요금 등에 합의했었음.
- 총거리 126km를 운행하는데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국제 철도선은 1992년 4월 일단 개통돼 화물운송에 이용됐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중지됐음. 당시의 전체 화물량은 20만t, 주요 수출입화물은 화학비료와 철강재료 등이었음.
- 북한 두만강역은 현재 8개의 차량교체 전용선로, 그리고 500개의 자국 컨테이너와 700개의 러시아 컨테이너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 역은 한반도중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될 경우 가장 유력한 2개 노선중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음.
- 2000년 9월 시작된 남북 간의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계기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 간에 거론되기 시작한 TKR의 TSR 연결방법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은 부산-신의주-중국횡단철도(TCR)-TSR 노선과 부산-원산-두만강역-TSR 노선임. 두만강역은 후자의 한반도 내 마지막 역임.
- 중국측은 연간 화물 처리량 560만t의 투먼역이 화북·동북지방의 각 대도시, 북한의 청진과 나진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두만강역을 경유한 하산까지의 국제철도 재개통으로 운송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북한 청진항·라진항을 통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의 무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지린성과 러시아 극동지방을 잇는 유일한 철도는 훈춘(琿春)-마하리노 노선이지만 러시아의 극동대철도망을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국제무역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그에 비해 투먼-두만강-하산 노선은 러시아 국가철도망에 직접 진입을 할 수 있어 이점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두만강역을 경유하는 투먼-하산간 철도의 재개통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라진과 청진을 자국의 국외 화물 운송 기지로 만들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현재로서는 러시아측에 유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는 중국의 한 기업이 투자유치 실패로 나진항 개발권 및 부두 사용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달 북한과 라진항과 하산-라진간 철도 구간간의 현대화를 위한 합의 문건에 서명했음. 이어 이달 중에는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 방문 때 이 사업을 추진할 합영회사의 설



립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올 1~2월 대북수출 큰폭 증가(4/2)**

- 2일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대북수출 총액은 1억9천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
- 특히 중국은 올해 1월에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9.9% 늘어난 1억3천5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수출
- 1~2월 수입액은 모두 7천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중국의 대북수출은 1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월 들어 증가율이 4%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1~2월 전체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통상 2월에는 연중 다른 달과 비교해 무역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당국이 검열 등을 이유로 각 무역회사에 배분했던 수입쿼터를 최근까지도 할당하지 않아 2월 들어 중국의 대북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이상기류설’ 북중관계 원상회복 시동(4/2)**

- 왕강(王剛)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1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강조
- 북한은 최근 핵신고 문제와 관련, 중국의 중재노력에 대해 “북미간의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중국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강 위원은 백계룡 북한 노동당 임업성 당위원회 비서 등 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를 소중히 여기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양국 관계문제를 집중 거론
- 왕 위원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우호와 친선,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은 확고하고도 변화할 수 없는 전략적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
- 이에 대해 백계룡 비서는 “조선노동당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인민들의 기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中, 남북한 긴장상태 예의주시(3/31)**

- 북한이 27~29일 북핵 문제는 물론, 통일·국방 분야에서도 ‘도발성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됨에 따라 중국이 큰 관심을 보이며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 관계였던 북한과 한 단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



는 한국과의 관계가 최근 경색된 데 대해 자국의 이익 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이 29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의 통지문을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취소 및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군이 통지문에서 “북한 군대는 군부 인물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의 당면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자국의 의장국으로 있는 6자회담의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음.

라. 일·북 관계

● 日정부, 對北제재 재연장 방침(4/3)

-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재차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화력선 환경보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의 6개월 시한부 제재조치를 발동한 뒤 작년 4월과 10월에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최대 외교현안인 남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는데다 핵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행키로 한 핵계획 완전신고의 2단계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로서 제재조치를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음.
-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와 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북일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상태에 빠지는 등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일본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미국과 함께 대북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라오스 日대사관 진입 탈북자 일본행 희망”(4/1)

- 라오스의 일본 대사관에 진입한 20대 남성 탈북자가 일본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 신문」이 1일 보도



-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은 점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는 탈북자 본인이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입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일본 정부는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국민 보호의 대상으로 입국을 인정하고 있음. 재일동포나 일본인 처 자녀 등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심사를 해 대응하고 있음.
- 일본에는 최근 몇년간 해마다 10명 정도의 탈북자가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정착한 탈북자수는 15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80세 이상 고령의 일본인 처가 100명 이상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에서는 1960년대를 전후해 실시됐던 북한귀환 사업으로 9만명 이상의 재일동포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으며 그 중에는 재일동포와 결혼한 일본인 처가 약 1천800명 포함됐었음. 일본 정부는 재작년 6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탈북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 지난해 2월부터 법무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에 담당 창구를 설치해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 상담 등을 하고 있음.

마. 기타

● 싱가포르 정부 “北, 미얀마에 무기수출說 조사”(4/4)

- 싱가포르 정부는 3일 자국의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이 미얀마에 로켓포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
- 싱가포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설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국의 회사가 관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외무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불법적인 밀매행위를 차단하자는 국제적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북한이 미얀마와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무역회사를 통해 로켓포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최근 보도했음.

● 北김영남, 阿洲 4개국 순방후 평양 귀환(4/1)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미비아.앙골라.콩고.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일정을 마치고 1일 특별기편을 이용해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지난달 18일부터 4개국 순방길에 오른 김 상임위원장은 20일 나미비아에서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보건 및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조에 관한 협정’과 ‘외무성 간 외교협상에 관한 양해문’을 각각 채택



- 그는 또 24일 앙골라를 방문해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산투스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측의 친선협조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이어 그는 29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측 간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NYT “남북·북미 갈등으로 北주민 고초 심화”(4/4)

-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당국 사이의 갈등 수위가 최근 부쩍 높아짐에 따라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초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4일 서울발로 보도
- NYT는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3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평양이 6개월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식량배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점 등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식량상황을 진단한 뒤 최근 심화 조짐을 보이는 남북한 간의 갈등도 상세히 소개
- NYT는 북한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로 지난해 북한의 경작량이 홍수 피해로 11~13% 가량 감소되고, 최근 전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에 따라 중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한 점, 올해 한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
- 이어 북한 당국이 올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까지 매년 이맘때 이뤄져온 한국의 식량 원조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며 이미 이 같은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 말 북한 내 곡물 가격을 70% 가량 오르게 했다고 지적

● NYT, 李대통령 대북 강경노선 부시에 새 문제(4/3)

- 뉴욕타임스(NYT)는 2일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일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보도
- 신문은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8년만에 처음이라면서 이는 남북관계가 10년 간의 화해무드 이후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신호라고 분석

- 신문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발언은 충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면한 난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
- 신문은 이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의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면서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말한 공약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도

● 美헤리티지, 한미관계 발전방안 제시(4/2)

-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이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남북관계와 동맹관계, 시장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제시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새 한국대통령 보수주의정책 변화 가져와’라는 보고서에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미관계 발전의 극적 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접근과 동맹관계 강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미국과 가치와 정책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주의 경제원칙들과 지역 위협들에 관한 이해 그리고 북한 지원 등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분명히 연계시키겠다는 조건부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의지는 민주.공화 지도자들의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면 한국은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의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한미관계 발전방안
 - △남북관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촉구해야 함.
 - △동맹관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말고 2011년까지 논의를 연기해야 함.
 - △시장정책 =한미FTA는 한국의 자유무역을 개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임.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나. 한·일 관계

● 한·일, **李대통령 방일 성과사업 등 협의(4/4)**

- 한·일 양국은 4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시 논의할 주요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회담에서 이명박 출범 이후 달라진 여건하에서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사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유 장관은 신정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살리기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3개 외교정책의 기초를 설명
- 이어 이 대통령의 방일(20-21일) 성공을 위한 일본측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올 하반기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이가 주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의 일측 투자 유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젊은이간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심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양국 재계간 경제협력 협의체 구성 방안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 양국 장관은 또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고비에 처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함.

다. 미·러 관계

● 부시-푸틴, 러시아 소치서 **고별회담(4/6)**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
- 만찬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안내로 소치 해변을 거닐며 담소를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6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 나토 확장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주요 안보 현안을 의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정